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2026 ~ 2030]

2026. 3.

목 차

I. 개요	1
II. 교정 정책의 환경변화	2
① 인구변화와 재범률(재복역)	2
② 국제 교정정책 동향	4
③ 기술환경 변화	5
④ 정책개선 필요사항	6
III. 제1차 기본계획 성과와 반성	6
① 제1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6
② 성과	8
③ 한계	13
IV. 제2차 기본계획 교정 정책 분야 설정 고려요소	14
V. 제2차 기본계획 정책방향	15
VI. 비전과 키워드 및 주요 추진 전략	15
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17
② 범죄성 개선과 재범률을 감소를 통한 국민 안전망 구축 ...	20
③ 치료·재활 시스템으로 교정 혁신	23
④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교정시설 구현	28
⑤ 교정행정 혁신을 위한 AI와 첨단기술 도입	31
⑥ 현장 근무자를 위한 교정공무원 처우 복지 개선	34
⑦ 개방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교정정책	36
VII. 입법 추진 계획	38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안)

I

(개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교정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최상위 계획

*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 (수립배경) 제1차 기본계획('21~'25)의 만기 도래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비전·목표 제시와 정책방향 설정 필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따른 기본계획 주요사항 >

-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방향
- ② 교정시설의 수용실태 및 적정규모의 교정시설 유지방안
- ③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확충 방안
- ④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 ⑤ 수형자 교육·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 ⑥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 ⑦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 (중요성)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는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이자 재범 예방과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단계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치주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후의 보루

* 법 제정(국회) - 법률집행(행정부·법무부) - 법률적용(사법부) - 교정·교화(법무부) - 보호(법무부)

※ 형사사법체계: 수사 - 재판 - 형 집행 - 사회복귀

- (수용현황) 최근 2016년 대비 2025년까지 평균 수용자가 15,000여명 증가하여 교정시설 수용률이 매년 상승 추세, 이는 단순 교정시설 운영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 과정의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
- (재범방지) 출소자 21~25%의 수용자가 3년 내 재범으로 재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체계적인 시스템, 효과적인 교정교화·치료·재활로 재범예방을 위한 교정정책 강화 필요

II

교정 정책의 환경변화

1 인구변화와 재범률(재복역)

- (사회환경변화) 인구증가* 및 연령계층**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내 범죄유형을 고려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정교화 필요

* 총 인구수: 2000년 약 4천7백만 명, 2024년 약 5천1백만 명

** 연령계층별 구성비: 65세 이상 연령대의 증가함에 따라 범죄유형의 변화 가능 시사

연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계(%)
2000	21.1	71.7	7.2	100
2015	13.8	73.4	12.8	100
2020	12.2	72.1	15.7	100
2025	10.2	69.5	20.3	100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 교정시설 수형자 연령별 현황

연도	계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2015	35,098 (100%)	309 (0.9%)	4,853 (13.8%)	7,678 (21.9%)	10,310 (29.4%)	8,624 (24.6%)	3,324 (9.5%)
2020	34,749 (100%)	279 (0.8%)	5,436 (15.6%)	6,488 (18.7%)	8,427 (24.3%)	8,941 (25.7%)	5,178 (14.9%)
2025	43,074 (100%)	307 (0.7%)	7,197 (16.7%)	9,007 (20.9%)	9,366 (21.7%)	9,408 (21.8%)	7,789 (18.1%)

연도	전체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발생건수	구성비
2015	2,020,731	622,126	30.8	35,139	1.7	248,707	12.3
2020	1,714,579	659,058	38.4	32,812	1.9	210,241	12.3
2023	1,613,754	669,303	41.5	41,287	2.6	182,621	11.3

※ 인구 연령대 통계자료에 따르면 재산범죄 양상으로 변화를 시사(보이스피싱·사기 등 심화)

※ 지난 10년간 60세 이상의 수형자가 9.5% ~ 18.1%로 고령 수형자 뚜렷한 증가 추세

- (정책변화) 범죄추이를 반영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정책 변화 필요
 - (다양성) 노인, 장애인, 외국인, 정신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교육·교화·치료·재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전문화 필요

- (정신질환) 정신질환 수용자 '18년 대비 '25년 3.3% 증가('25년 전체 10% 6,345명), 전문 치료·재활 업무 증가와 함께 수용관리 업무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

□ (재복역률) 교정정책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한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로 직결되므로 효과적인 교정교화·치료·재활로 재복역률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 증가

범수 조사연도 (출소연도)		계	초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2015 (2011)	출소 인원	23,045	11,974	4,369	2,093	1,281	3,328
	재복역인원	4,936 (21.4%)	1,045 (8.7%)	982 (22.5%)	711 (34.0%)	518 (40.4%)	1,680 (50.5%)
2020 (2016)	출소 인원	27,917	16,500	4,835	1,913	1,170	3,499
	재복역인원	7,039 (25.2%)	1,928 (11.7%)	1,407 (29.1%)	828 (43.3%)	609 (52.1%)	2,267 (64.8%)
2025 (2021)	출소 인원	26,363	15,324	4,590	2,082	1,188	3,179
	재복역인원	5,600 (21.2%)	1,420 (9.3%)	996 (21.7%)	767 (36.8%)	543 (45.7%)	1,874 (58.9%)

- (재복역 추이)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수형자의 입소경력 추이를 살펴보면 '20년 대비 '25년은 4%감소된 21%대 재복역률 감소 추세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현황 >

	수용정원	1일 평균 수용인원	수용 내용					
			수형자	미결수용자			기결:미결	노역장 유치
				계	피의자	피고인		
2015	46,600	53,892 (100%)	32,649 (60.6%)	19,267 (35.8%)	847 (1.6%)	18,420 (34.2%)	1.69:1	1,976 (3.7%)
2020	48,600	53,873 (100%)	33,392 (62.0%)	19,084 (35.4%)	558 (1.0%)	18,526 (34.4%)	1.75:1	1,397 (2.6%)
2025	50,614	63,680 (100%)	40,564 (63.7%)	21,648 (34.0%)	685 (1.1%)	20,963 (32.9%)	1.87:1	1,468 (2.3%)

- (범죄횟수와 재복역률 상관관계) 수용자의 범죄횟수가 증가할수록 재복역률은 비례적으로 상승, 특히 3범이상 평균 재복역률이 40% 초과

② 국제 교정정책 동향

- (국제 트렌드) 주요 선진국은 과밀수용 해소, 교정시설 현대화, 치료·재활·교육 중심으로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
- (미국) 과밀해소, 재범방지,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교정 확산
 - 과밀수용 해소와 비폭력 범죄자(경범죄 대체처벌* 등) 선별적 석방 확대를 통한 수용인원 감소 정책 강화
 - * 비폭력 범죄자 선별적 석방 정책: 마리화나 비범죄화, 경범죄 대체처벌 적용
 - 재범방지 중심의 프로그램 강화
 - 교육·직업훈련 투입 확대: 고졸·대학 학위 프로그램 제공 확대
 - 심리치료·약물중독 전문 치료 강화
 -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교정 확산
 - AI 기반 위험도 평가 도구(Risk Assessment Tool) 도입 등
- (영국) 보안강화 및 재범률 감소를 위한 구조개편
 - 구금과 사회복지의 이원화 전략 강화
 - 수용자 분류체계 고도화 및 출소 12개월 전부터 의무적 취업·숙소 매칭 프로그램 지원
 - 첨단 보안·마약 대응 정책
 - 휴대전화 탐지 스캐너·드론 방호 시스템 도입 확대 및 마약 대응을 위한 전문 약물치료 수용동 운영
- (일본) 고령 수용자 대응, 스마트 교정, 사회복지 정책 강화
 - 고령 수용자 폭증에 대응
 - 노인 전담 수용동, 의료전담교도소 확대
 - 스마트 교정 정책 강화
 - 교도소 내부 지능형 센서·카메라 영상 시스템 고도화
 - 출입기록·동선 파악을 위한 ICT기반 중앙통제 시스템 확립
 - 사회복지 정책 강화
 - 출소 후 취업 연계 NPO(비영리 목적 조직)와 협업
 - 경범·초범자에 대한 구금 대신 사회내 처우 확대

3 기술환경 변화

- (세계) '24년 AI 투자는 전년 대비 18.7배 증가*, 시장규모는 2.8천억\$, '30년 2조\$까지 성장 전망**, IT 등 첨단산업 및 쏘 산업에 적용 확대

* 스탠퍼드 HAI(2025), AI Index Report 2025

** Grand View Research(2025)

- (국내) AI 시장규모는 약 6조원이나 적용분야가 제한적이며, 고품질 데이터와 전문인력 부족, 투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성장에 한계

- (시스템 영향) AI를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정책수립, 정책수립 기간 단축 등이 기대되나, AI에 대한 전문성 부재, 세대간 AI 활용도 차이 문제 상존

- (교정환경) '20년 이후 첨단기술을 활용한 각종 시스템 구축 등 첨단기술 교정정책 수립 지향

- (교정부문 영향) AI를 통한 과학적·체계적 교정정책 수립, 교정교화 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등 개선*이 기대되나, 높은 구축비용과 전문 부서 부재 등으로 도입 지연

* (세계) AI 기술 기반 스마트 교정시설 솔루션 구축을 통한 스마트 교정 정책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 미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대만, 유럽, 대한민국 등 세계 각국에서 ICT를 활용한 첨단 교정 시설 구축하고 있으나, 노후 시설 교정시설에서는 첨단 교정정책 적용이 어려움

- (AI·ICT 활용) 첨단기술을 활용한 AI기반 교정정보 빅데이터, 수형자 VR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KICS 교정시스템에 AI 도입 등 AI·ICT를 활용한 정보화 사업 추진 필요

〈첨단기술 도입 추진경과〉

- ① (2002 ~ 2003) 구 보라미 시스템 및 교정기관 중앙통제실 설비 개선
- ② (2015)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및 운영, 교정 스마트 관제센터* 구축(2017)
- ③ (2019 ~ 2023)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1·2·3차 사업, 스마트 교정환경* 구축하여 운영
 - * 지능형 CCTV 도입,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민원인·수용자용 키오스크 구축, 스마트 접견시스템 등
- ④ (2024) 교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교정본부 종합상황실, 차세대 KICS 교정시스템 구축
 - * 외부의료시설 고성능 웹캠 다중 감시시스템, 호송차량 위치추적시스템, 수용자 위치추적 시스템
- ⑤ (2025) VR 가상현실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개시

④ 정책개선 필요사항

구분	주요 현안	→ 개선 방향	목표	정책개선 필요사항
수용환경	과밀수용 및 수용처우 악화		인권존중	▶ 과밀수용 해소방안 다양화 ▶ 수용자 처우의 다각화
교정교화	직업훈련 실효성 교육·교화 다양화 심리치료 전문성		재복역률 감소	▶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강화 ▶ 사회복귀와 연계된 교육·교화 신설 ▶ 심리치료·재활의 전문성 강화
스마트 교정	전문 부서 부재로 첨단기술 안착 한계		AI·첨단 교정	▶ AI·ICT 연계한 첨단기술 개발·운영 ▶ 첨단 교정시설 확대 및 운영
조직역량	만성적인 교정 인력 및 전담시설 부족		조직혁신	▶ 교정 조직의 신설 ▶ 특수 전담 교정시설 운영 및 인력 확충
국민신뢰	폐쇄적인 교정정책		개방성 다양성	▶ 규범 제정 적극 참여 ▶ 교정정책 개방과 투명성 확보

Ⅲ 제1차 기본계획 성과와 반성

① 제1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 (기본방향)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프라 정비, 전문적·체계적인 교정교화 및 개별처우 추진으로 개방성과 투명성 확보, 국민의 신뢰회복, 조직역량 강화 등 4차산업 연계한 미래 교정행정 구축
-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교정정책 방향 변화*, 사회경제 시스템 급변,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교정행정 발전 모델 제시

* UN 산하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CCPCJ): 형사사법 시스템의 회복적 사법 도입 및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개입 결의안 채택

**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 회의(APCCA): 2019년 APCCA에서 IT기술을 이용한 교정시설 운영, 약물남용 및 정신질환 수용자 처우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대적 교정시설의 운영과 특정범죄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례 공유

- (비전·목표)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이라는 비전 아래 5대 목표, 22개 정책과제 설정

〈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

비전 :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5대 목표	1. 인권중심 2. 다양성 존중 3. 국민신뢰 4. 조직혁신 5. 스마트교정
5개 부분 22대 전략	
인권중심 “Ⅰ. 사람을 사람답게”	
1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현대화
2	의료처우 증진
3	보호장비 사용 및 출정업무 개선
4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방안 마련
5	교정공무원 인권 감수성 제고
다양성 존중 “Ⅱ. 틀리게 아닌 다른”	
6	과학적 분류처우 및 개별처우 강화
7	교육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8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활성화
9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10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공
국민신뢰 “Ⅲ. 개방적이고 투명한”	
11	교정행정 투명성 확보
12	지역사회 자원활용 및 홍보강화
13	교정업무 민간참여 활성화
14	회복적 사법
조직혁신 “Ⅳ.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15	조직운영 효율성 증대
16	교정공무원 역량 강화
17	수용자 중심의 교정시설 건축
18	교정공무원 복지 개선
스마트교정 “Ⅴ. 미래지향적인”	
19	기술융합을 통한 첨단 교정행정 구현
20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21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실효성 확보
22	비대면 교정서비스 제공

②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성과

○ (인권중심)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환경 개선 등을 통한 수용자 인권 향상

- 교정시설 신축 및 증·개축*을 통해 1,650명의 신규 수용공간 확대, 교정시설 현대화와 과밀수용 출구전략으로 가석방 기준 완화(가석방 인원 2021년 9,390명 → 2025년 12,265명 30.6% ▲)와 중간처우 시설 확대**를 통한 교정시설 과밀완화에 기여

* 신축·현대화 기관(강원북부교, 거창구, 대구교), 증·개축 기관(경북제3교 등 17개 기관)

** 2023년 평택 희망센터, 2024년 홍천희망센터 개청 및 희망센터 정원 증원(20명→50명, 150%▲)

- 전국 교정시설 독거실 비율을 60%이상*으로 설계하여 악풍감염 예방 및 수용환경 개선과 벽걸이형 사물함 설치, 수용동 창고 마련 등 실제 사용 가능한 혼거실 수용공간 확보 노력

* 신축 교정시설 독거실 비율: 2020년 강원북부교도소 68.1%, 2023년 거창구치소 61.9%, 2024년 대구교도소 65.2%

- 신속한 의료처우 시행을 위해 원격의료시스템 54개 기관 구축 등 의료 인프라 현대화*,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고도화(매뉴얼 개발, 예방접종 확대 등), 질병예방활동(건강검진 내실화, 심평원 업무협약**) 시행

* 집중 의료처우기관(혈액투석) 지정: 서울남부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

** 심평원 업무협약: 수용자 입소자 개인별 투약이력 조화를 통한 치료 연속성 확보

- 인권 친화적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정본부 내 인권업무 전담팀 구성(특별점검팀) 및 교정시설 인권침해 요소 점검, 인권교육 운영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집 발간, 수용자 인권향상 워크숍 개최, 법무연수원 인권 강화 교육과정 개설

-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적 침해 최소화되도록 사용 시간, 절차 등 요건 강화 및 사용빈도가 높은 보호장비 개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용 보호장비 개량*

* 개량형 수갑(손목보호 수갑), 머리보호장비 개발(머리에 가해지는 압박감 최소화)

- 전화사용 확대*를 통해서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고 가족 및 사회와 유대감 강화와 사회적응능력 증진 노력

* 개방처우급 월 5회 → 월 20회, 안회경비처우급 월 3회 → 월 10회, 일반중경비처우급 필요시 월 2회 이내 → 월 5회

- (다양성 존중) 개별처우 강화 및 치료 프로그램·직업훈련 등 다변화
 - 과학적 분류심사 및 개별처우 강화를 위해 권역별 독립 분류전담 기구 운영과 정밀분류심사 체계* 구축 등 분류센터 기능 강화

* 권역별 정밀분류심사 체계: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진단과 관리체계

- ‘한국 수형자에 대한 다면적 평가시스템(KIMAS)’ 개발(’23.), 최신 범죄동향(강력범죄, 모방범죄, 마약범죄, 비접촉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반영한 신규 위험성 평가도구 방법으로 한국 수형자 맞춤형 평가 기반 마련
- 경비등급별 처우 표준운영모델*을 정립하여 수형자의 적정 처우 수준 판정 및 재범위험성 관리, 단계적 처우, 개별처우 내실화

* 모범수형자 자율처우 제도 도입,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경비처우급 분류지표」 개정

-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소년과 같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 개발 및 수용자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 기여 활동 강화

* 수용자 미성년 자녀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 자녀 지원 현황 2022년 ~ 2025년까지 총 2,077명의 수용자 자녀 지원(’22년 164명, ’23년 531명, ’24년 690명, ’25년 692명)

- 소년수형자 대상 처우 강화를 위해 만델라 소년학교*(’23. 3.) 개설 및 피해자 공감교육, 가족사랑캠프를 통한 보호자 교육, 1인 1악기 음악·예체능 교육, 진로 특강 등 다양한 인문교육 확대

* 서울남부교도소 내 설치한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반, 대학준비반 등 학과교육 중심의 소년수형자 전문 교육시설

- 교육교화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연령·범죄별 맞춤형 교화프로그램* 구성 및 가족관계 회복·사회적 처우 강화 교화 프로그램 도입 등 수형자의 재범방지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마련

* 전국 아동친화형 가족만남실 설치, 제로캠프 프로그램(뮤지컬·연극) 활성화, 체험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시행,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감사나눔 체계 확립(감사습관 조성 교육, 감사나눔 활동 공모전 시행)

- 출소 후 취업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환경 변화에 맞는 반도체 설비보전, 지게차 운전, 청소·웹툰·용접 등 다양한 취업 유망직종 훈련과정 신설 및 고급 훈련 과정*, 취업 연계 직업훈련 과정** 확대 시행

* 고급 훈련 과정: 사무자동화, 전산응용설계 정보통신, 건축설비 등 ’21년 216개에서 ’25년 256개 확대

** 취업 연계 직업훈련 과정: 25년 취업연계 숙련과정 화성직훈(교) 등 21개 기관 40개 과정에서 수형자 95명 대상 시행

- (국민신뢰) 교정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 참여 활성화, 지역사회 연계
 -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소통 창구를 통해 주요 정책을 카드뉴스 및 영상 배포하고, 언론·방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정정책에 대한 개방적 홍보정책* 추진

* 보도자료 등 SNS 홍보 공개건수: 2021년 총 206건 → 2025년 총 1,186건, 2021년 대비 575% ▲

- 교정본부 민원톡을 마련하여 교정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측정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민원인, 변호인 접견설문조사, 보관금품 설문조사 등 대국민 교정정책 의견 수렴

- 가석방, 귀휴, 외부교통 등 교정행정 주요 이슈에 대한 상시 외부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로 국민 참여 정책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 기반 마련

* 2021년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설치 → 2023년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통폐합(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개편) 등 교화방송자문단,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교정업무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정위원 증원* 및 교정교화 활동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전문 교육 등 전문화 과정 운영과 권역별 교정위원 제도를 활성화

* 2025년 전국 교정위원 총 5,406명(2021년 대비 996명 증가▲), 2021년 4,410명, 2025년 4,982명

- 지역사회 자원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교정위원, 교정참여인사, 외부강사의 적극적 참여 정책을 실시하고, 수도권 중심의 교정작품 전시회를 거점 지역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정책 시행

*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각 지방교정청에서 교정작품전시회 개최(제52회 ~ 제54회)

-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 재통합을 위해 회복적 사법 정책을 추진하는 관련 협력기관과 연계한 농촌지역의 수형자 보라미 봉사활동* 강화 등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모색

*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실적: 2025년 3,680건명으로 2021년 대비 3,680명 증가▲(2021년 0명, 2022년 11명, 2023년 305명, 2024년 896명)

○ (조직혁신) 조직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 조직 신설* 및 교정 공무원의 전문역량 강화**, 교정공무원 복지 개선

- 교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정본부 내 총액 인건비제, 자율처우기구를 통한 전문조직 신설* 및 부서 편제조정*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

* 2021년 코로나19 긴급대응단, 2022년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팀, 2023년 마약사범재활팀, 특별점검팀, 광역특별사법경찰팀, 2024년 교정정보빅데이터팀, 2025년 교정대외협력단 등 조직체계 신설·개편 운영

- 마약사범재활팀*, 특별점검팀**, 교정정보빅데이터팀·교정특수호송팀*** 등 교정 조직체계 신설·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교정정책 추진

* 마약사범재활팀: 마약사범 중독재활 인프라 확보[부산(교), 화성직업훈련(교), 청주여자(교), 광주(교), 대구(교)]

** 교정분야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교정본부 특별점검팀, 지방교정청 및 소속기관 광역특별사법경찰팀(대)

*** 교정정보빅데이터팀: 주요 교정정보 데이터를 DB에 연계 및 시각화, 교정특수호송팀: 호송업무 전문성 강화

- 교정인력 적정 배치·운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 인력진단*을 분기별로 정례 실시함으로써 경비등급별 수용관리 인력배치 표준화 및 보안중심 인력을 교정교화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기능별 효율적인 인력 운영
-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확충 및 수용자 자녀지원 전담팀 신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수용자 자녀지원 전담직원 채용 등 전문 인력 확보

* 전문인력: 의료인력(직제) 71명 확보(2021년 ~ 2025년), 수용자자녀지원 사회복지사 4명(공무직) 확충

- 행정여건 변화와 조직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리더십 교육 확대 및 조직·인사 예산 등 실무 위주의 교육 확대, 국내·외 장기훈련 석·학사 등 교육을 통해 교정비전을 수행할 전문직원 양성

* 2021년~2024년: 리더십 교육과정 수료 176명(기관장,관리자), 전문직원 양성 55명(대학원 석학사 및 외국어 위탁교육)

-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정신건강 지원 확대(마음나래, 직무스트레스) 및 보안근무 환경 개선(4부제 정상화 운영, 팀제 근무 활성화 등), 수당*(계호업무수당 가산금, 수용동 특정업무경비) 신설, 기능별 맞춤형 근무복** 도입

* 수용동 근무자 특정업무경비, 계호업무수당 가산금,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 등 기피 수용자 수용 “위험수당” 지급방식 개선(일할계산에서 전액 지급)

** 계절성(스웨터, 방한점퍼, 기능성 여름티), 기능성(원피스형 임산부, 간호사복, CRPT 복장 신형) 등

- (스마트교정) 빅데이터·IOT 등 기반 기술을 도입*하여 첨단기술 연계 및 노후화된 시스템 개선·데이터 기반 업무처리**로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 수용자 스마트접견 등 비대면 중심의 민원 서비스 개선

* 호송차량 스마트관제 운영, 수용자 번호표 도입, 교정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차세대 KICS 연계,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등

- 첨단교정의 과학화를 위해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키오스크(민원인, 수용자용 KIOSK), 수용자 카드형 번호표를 활용한 실내 위치추적 시스템 등 적극적인 과학기술 접목 모색**

* 교정정보시스템 디지털화 및 모바일 교정정보시스템, 급양, 차량관리 프로그램 개발, 차세대 KICS 형사사법 시스템 연계,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등

** 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용자 활력징후 감시시스템(레이더), 무소음 이동형 CCTV, 위치추적 기반 스마트밴드 개발 운영 시도

- 기술융합을 통한 첨단 교정행정 구현을 위하여 Io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교정 통합 관제시스템 도입, 수용자 외부의료시설 및 호송차량 위치추적,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합하여 다중 감시체계* 구축 완료

*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교정본부 - 지방교정청 - 소속기관 중앙통제실 3단계 다중감시체계 구축

- 전국 교정기관에 법원간 영상재판용 영상 재판실 구축, 운영과 차세대 KICS 교정시스템 구축으로 법원 및 형사사법기관과 데이터 전자문서 유통을 통한 타 부처와 유기적인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

* 법무부, 법원, 검찰, 경찰, 해양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데이터, 전자문서 유통기반

- 교정통계 데이터를 연계·분석·시각화하여 데이터 기반의 운영을 제고하여, 법무부 및 교정본부 누리집에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정정책 관련 정보 접근성 증대

* 교정관련 맞춤형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

- 민원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한 다기능 민원단말기* 및 AI 인공지능 기반의 교정민원 안내 채팅봇을 도입하여 교정본부 카카오톡 채널과 연계, 원격 접견을 위한 스마트접견** 활성화 등 비대면 민원 서비스 구축 제공

* 민원인 키오스크: 전국교정기관 민원실 설치 운영, 수용자용 키오스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시범운영

** 무선 LTE 단말기를 도입하여 민원인 및 변호인 스마트 접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수용자 접견 편의성 확대(2025년 스마트접견 793,017건으로 2021년 대비 330% ▲ 증가(2021년 239,615건)

③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한계

○ (인권중심) 과밀수용, 의료처우, 인권 관리 기반 정체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1,650명 수용공간을 늘렸지만 수용자는 53,873명 → 61,366명(7,493명 증가)으로 증가해 실질적 개선 효과 미비
- 의료·정신질환자 대응을 위한 전문의 결원률이 여전히 20% 이상으로 의료처우 체계 구축이 미흡(정원 115명, 현원 92명)
- 보호장비 기준 강화·전자기록 열람 등 핵심 인권과제는 대부분 보류·미이행 상태로 실질적인 인권 및 권리 향상 정체

○ (다양성 존중) 분류체계 고도화, 개별처우 및 각종 프로그램 효과 미비

- 분류·개별처우 체계 향상 및 취약계층 대상 매뉴얼 부재 등으로 수용자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매뉴얼 개발 필요
- 소년 수용자 전체 140명 중 30명(21%)으로 만델라 학교 실질적인 확장 필요
- 직업훈련·심리치료 역시 프로그램 확대는 있었으나 전문강사·훈련장 부족, 심층평가·효과성 분석 미비로 정책 전체의 효율성 제한

○ (국민신뢰)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참여 노력 부족

- 교정행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연간보고서·대국민 설문 등 핵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국민 의견 반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미비
- 회복적 사법 관련하여 '21년 대비 외부 봉사활동 3,650명 확대 외 피해자-가해자 회복 프로그램 부족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결여

○ (조직혁신) 필수 전문직군 인력 확보율 및 직원복지 향상 저조

- 인력진단은 매년 시행했으나 실제 인력배치 표준화·업무량 기반 적정인력 산출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 미흡
- 의료·상담·통계 등 필수 전문직군 확보율 저조로 조직역량 정체
- 교도관 트라우마센터 미설치, 스트레스 프로그램 활성화 미흡 등 핵심 추진 과제 현장 적용 부족

- (스마트교정) 미래형 핵심사업 대부분 중단 및 첨단 교정 전환 저조
 - 안티드론 등 미래형 ICT 핵심사업은 대부분 중단·보류, 지능형 CCTV관제 등 일부 장비 도입으로 첨단 교정 사업 실적 저조
 -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체계 미정착으로 교정 빅데이터는 국민 공개용 시각화 수준에 머물고, 내부 정책평가·예측 기능 미구축

IV 제2차 기본계획 교정 정책 분야 설정 고려요소

□ 교정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 여건

- (과밀수용) 시설 부족 문제를 넘어선 수용자 인권 및 교정공무원 업무 환경·처우 악화 문제
 -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장기화로 수용자 인권침해, 교정공무원 업무 가중, 범죄성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효과성 감소
 - 교정공무원 근무환경·정신건강 악화 등 2차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또는 해소가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정책의 균형성) 엄정한 법집행과 성공적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예방 균형성 필요
 - 최근 강력범죄·이상동기범죄·마약범죄·정신질환자범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수용자 인권존중 및 범죄성 개선으로 성공적 재사회화를 통한 재범예방 요구 증가
- (장애요소 해소) 효과적인 교정·교화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필요
 - 교정시설 운영의 인적자원 문제는 구조적 비효율과 전문성 저하로 인한 수용자의 재범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의 실효성을 약화
 - 교정시설의 노후화는 안전사고 위험과 첨단기술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운영 등 저해 요소로 작용

V

제2차 기본계획 정책방향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 접근법 채택, 예산집중, 조직 개편 및 시스템 혁신으로 **교정정책 실행력 극대화**

1. **명확한 중장기 목표 설정과 비전 제시로 국민 신뢰를 높이는 투명한 교정정책 실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전체를 아우르지만, 세부내용은 **개별계획**에 **자율성**을 주는 **적절한 깊이**의 정책
3. 단순 수용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취약계층, 청년세대, 과학기술 등 타 분야와 유기적 연계와 균형**을 고려하는 정책
4. 달성이 가능한 목표가 아닌 **달성이 어려울지라도** 가야만 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정책
5. **교정본부의 구체적 역할**을 **재정립**하여 **정책수립-집행-협력 분야**를 **명확히 구분**, 정책 실행의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 설정
6. 교정정책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VI

비전과 키워드 및 주요 추진 전략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

- (방향) 교정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① 선택과 집중, 치료·재활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② 과밀수용 해소 등 수용자 인권존중 ③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교정 구축 ④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통한 재범예방과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축

- **[비전]** 교정의 가치 창출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 이라는 비전 아래 **4대 목표, 7대 추진 전략** 설정

교정정책 4대 목표

-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율을 감소**

일반수형자	21.2%	18.8% (24%p ▼)
성폭력사범	18.6%	→ 15.6% (3%p ▼)
마약류사범	34.5%	26.5% (8%p ▼)
- **30년 까지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25) 127%(50,614) → (‘30) 100% (54,752)
- **AI 등 도입을 통한 첨단교정 구축** AI 교정 통합 플랫폼 구축
-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조직 정상화** 현장인력 확대 및 직제 정상화

7대 추진 전략

인권 존중	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① 인권의식 및 수용자 방어권 향상 ② 의료체계 및 보호장비 개선
재범 예방	② 재범예방 및 재범율을 감소 를 통한 국민 안전망 구축 ① 맞춤형 교육을 통한 재범예방 및 사회 재통합 ② 산업수요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직업훈련
중독 재활	③ 치료·재활 시스템으로 교정 혁신 ①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체계 확립 ②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구조 개선
과밀수용 해소	④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교정시설 구현 ① 과밀수용 해소를 통한 인권처우 강화 ②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수용환경
AI · 첨단기술	⑤ 교정행정 혁신을 위한 AI와 첨단기술 도입 ① AI 교정 통합 플랫폼 구축 ②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정 디지털 혁신
조직 혁신	⑥ 현장 근무자를 위한 교정공무원 처우·복지 개선 ① 한단계 도약하는 교정 조직 ② 교정공무원 역량 강화 및 처우 증진
열린교정 · 홍보	⑦ 개방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교정정책 ① 교정정책 투명성 강화 및 국민 공감형 정책 실현 ②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정홍보정책 및 이미지 개선

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 인권의식 및 수용자 방어권 향상

"교정공무원의 인권의식 제고와 수용자 방어권 실질적 보장을 통해 신뢰 받는 교정행정 구현"

- (인권교육) '26.~'30.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구현을 위하여 분기별 인권 교육, 인권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국가 인권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불필요한 관행 개선 이행을 통해 인권의식 향상 도모
 - 인권 감수성 강화: '26. '법무샘 교정인권 자료실*' 등재 코너 운영 및 인권 업무담당자 워크숍 정기 개최, 외부강사 초빙 교육 확대
-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 인권 자료 공유
- 필수 인권 교육과정 개편: '26.~ 법무연수원 '보안실무 전문화과정에 인권 침해 방지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개선
- (방어권) '26.~'30.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이 PC,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접견을 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단계적 확대, '26.~'27. 수사 및 공판 확대를 위해 공무상 접견실 증설(71개소)
 - 변호인 스마트접견: '25기준 서울(구) 1개 시범운영 중, '27기준 전국기관 확대
 - 공무상 접견실: '25기준 전국 55기관 205개 운영, '30까지 까지 71개 증설 추진
 - 공무상 접견실 신설·환경개선(리모델링): '26기준 3개 기관 수원(구), 광주(교), 군산(교) 증설 및 개보수 '27기준 12개 기관 25개* 호실 개보수

연도	변호인 스마트접견	공무상 접견실 증설	공무상 접견실 개선
2026	서울(구) 등 12개 기관 29개 호실	광주(교) 3개 호실	수원(구)·군산(교) 13개 호실
2027	전국 교정시설 확대 시행	서울(구) 5개 호실	서울(구) 등 12개 기관 25개 호실
2028		수요현황 분석 후	
2029		예산 범위 내 단계적 신설	
2030	경기북부(구)·화성여자남원(교) 신설 운영	전국 확대 추진 총 71개 호실	

* 변호인 스마트접견 확대(12개 기관): 서울(구), 수원(구), 동부(구), 인천(구), 남부(구), 화성직훈(교), 대구(교), 부산(구), 창원(교), 대구(구), 대전(교), 광주(교)

** 공무상 접견실 개선(12개 기관): 서울(구), 동부(구), 강릉(교), 영월(교), 강원북부(교), 대구(교), 거창(구), 대전(교), 청주(교), 공주(교), 전주(교), 정읍(교)

□ 의료체계 및 보호장비 개선

"수용자의 생명·건강권이 보장되는 의료체계 및 보호장비 개선으로 인권의 가치를 실현"

- (의료처우) '26.~'30.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 장비 현대화를 통한 환자 중심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용자 건강검진 등 예방중심의 관리체계를 통한 의료처우 내실화 실현
 - 의료인력 확충계획: '26.~'30. 의무관 결원을 감소를 위한 처우개선, 홍보 활동 강화,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 단계적 충원
 - 의료장비 현대화: '26.~'30.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치과파노라마촬영기, 전해질분석기 등 최신 장비 도입으로 환자 중심의 인프라 구축
 - 예방중심의 환자 관리*: 고령자, 기저질환자에 따른 집중처우를 시행하여 질병의 중증화를 방지하고, 건강검진체계 강화를 통한 질환 의심자 집중관리
- * 만성질환자 월 1회 이상 혈압, 혈당 측정 현황 모니터링, 온열질환 고위험군 명단 관리 및 의료처우 적극 실시
- 정신질환 수용자 중점 관리: '26.上 서울동부(구) 정신건강팀 시범운영 및 정신치료 중점수용동 설치 '27.~ 대전청, 광주청 1개 기관씩 정신치료 중점수용동 추가 설치
- ※ '28. 정신건강 인력(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확보 및 역량강화

연도	분야	연간목표
2026	의료인력 확충	- 의무관 6명 추가 채용/ 결원을 15% 이하 달성
	의료장비	- 내용연수 경과 장비 교체/ 최신 진단기기(치과 파노라마 등) 도입 추진
	예방관리	- 고령자,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수용자 집중관리 실시
	정신질환 처우 개선	- 정신질환 처우 체계 수립(서울동부구치소 정신건강팀 시범운영)
2027	의료인력	- 의무관 4명 추가 채용/ 결원을 12% 이하 달성 - 증원계획(의사3, 약사 8, 간호사 10, 방사선사 18)
	정신질환 처우 개선	- 서울동부구치소 정신치료 중점 수용동 설치
2028	의료인력	- 의무관 2명 추가 채용/ 결원을 10% 이하 달성 - 증원계획(의사3, 약사 10, 간호사 10)
	예방관리	- 만성질환 관리 표준화 지침 마련(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정신질환 처우 개선	- 정신건강 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2029~ 2030	의료인력 및 장비	- 증원계획(의사3, 약사 10, 간호사 10) - 장비 현대화 및 의료인력 지속
	예방관리	- 만성질환자 자기관리 체계 마련(비침습적 혈당 측정기 활용 등)
	정신질환 처우 개선	- 대전지방교정청 기관 정신 치료 중점수용동 설치
		- 광주지방교정청 기관 정신 치료 중점수용동 설치

- 혈액투석 전담기관 '26~ 기관 신설 원주(교) 및 병상 확대 대구(교) 추진

* 전국 5개기관 46병상 (10병상 기관) 서울남부(교)·서울동부(구)·대전(교), (8병상 기관) 대구(교)·광주(교)

- (보호장비) '26.~'30. 보호장비 착용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부상방지 예방을 위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보호장비인 한손수갑, 한발목 보호장비, 양발목 보호장비 등의 신체의 접촉면을 라운드형으로 개선

구 분	세부장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한손수갑	·시제품 제작 ·시범 운용(6개 기관) ·확대 시행(49개 기관)	·소요량 파악 및 예산 범위 내 배정 ·교정기관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시 장비 보완			
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			"	
	양발목보호장비	"			"	

※ '26. 상반기 시범 운용(6개 기관) : 서울(구), 안양(교), 인천(구), 대구(교), 대전(교), 광주(교)

※ '26. 하반기 확대 시행(49개 기관) : 시범 운용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 (진정·보호실 운영 개선) '26.~'30. 수용자를 진정실 또는 보호실에 수용하는 경우 교도관이 수용시간 등 수용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도록 '보호실·진정실 수용심사부'를 작성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법무부령 제1108호(2026. 2.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 재범예방 및 재복역을 감소를 통한 국민 안전망 구축

□ 맞춤형 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및 사회 재통합

"수용자 범죄유형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재사회화 및 실질적인 재범예방 실현"

- (재사회화 강화)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의 위험성 수준 **한국 수형자에 대한 다면적 평가 시스템** 평가 강화, 인성 함양 및 재범 예방을 위한 맞춤형 인성교육·AI 디지털 윤리 교육 실시
 - 맞춤형 인성교육 **체육교육, 피해자공감교육 확대**, AI·디지털 윤리교육 **석방전 수형자 재범방지**, AI·디지털 기본교육 **모범수형자 A기본소양 교육기관 2개** 도입

※ 맞춤형 인성교육 체계화 및 재범방지를 위한 AI 윤리 교육 도입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맞춤형 인성교육 체계화	데이터 기반 맞춤형 인성교육 실시 (취약수형자 대상)	체육공감 및 피해자 공감 교육 효과성 분석	집중인성 교육 점진적 확대		
재범방지를 위한 AI 윤리 교육 도입	·AI윤리교육 체계 마련 ·출소전 AI 윤리 교육 시범운영	·방송대 AI활용 재범예방교육 및 기본소양 교육 시행 [여주(교), 청주여자(교)] ·내부전문가 양성		전체 프로그램 정비 및 본격 시행	

* 취약수형자 대상 확대 운영(소년, 장애인), 김천(교), 안양·순천(교)

※ 개별처우 실효성 강화 추진계획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수형자의 수요와 현실 여건 조화	적성검사 도구 대상 확대 및 담당 직원 교육 실시	개별처우 수립 체계 개선	개별처우 이행 평가 체계 전환		
개별처우계획의 이행성과 반영	이행성과 반영 방안 발굴	개별처우 실효성 강화계획 수립	경비처우급 조정 시 반영	가석방 심사 시 반영	
분류심사 업무 여건 조성	CBT* 개발사업 수요 제출	CBT 개발 준비	CBT 개발	시범운영	전국 시행
	분류심사 환경 개선 계획 수립	분류상담실 등 리모델링	분류상담실 등 신규 설치		
	소속기관 분류심사과 설치 지속 추진				

* CBT(Computer Based Testing): 기존 지필 평가에서 탈피하여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로 시행하는 평가 방식

- (사회 적응력 강화)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등** 지역사회 상생 교화모델 구축을 통한 사회 재통합, 실천형 감사나눔 운동 전개, 가족만남의 집 신설*, 가족사랑캠프와 같은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확대**

* '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경북북부제3교도소 가족만남의 집 신설

** 가족사랑캠프 시행 확대('25년 105회 →, '26년 158회)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사회봉사 운영 확대 (봉사활동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장)	2,800명 (2025: 2,696명)	2,830명	2,860명	2,890명	2,920명
가족만남의 집 운영 확대	1,680명 가족만남의 집 1개 신설 * 경북북부제3교도소	1,710명	1,740명	1,770명	1,800명
가족사랑캠프 운영 확대	158회	158회	212회	212회	212회

※ 실천형 감사나눔 운동 개선 추진계획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효과성 분석	주요 변화 평가 지표 개발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화	중간평가 및 개선점 도출		최종평가 및 성과 분석
공모전 내실화*	공모전 통합 시행 (연 1회)	찾아가는 전시회 개최		우수사례 통계 분석	
감사문화 확산	감사125운동** 추진	감사나눔 문화활동 추진 (그림, 4컷만화, 캘리그래피 등)		공모전 평가	

* 공모전 내실화: 단계적 확정을 통해 지속적 참여 유도

** 매일 선행 1개, 매달 독서 2권, 매일 5가지 감사하기

- (위기 가족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의 지원(**지원 예산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위해 체계 구축 및 민간지원 연계* 강화, 수용자의 안정적인 가족관계 회복 도모

*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등) 협의체 및 민간단체(월드비전, 기타 민간단체) 맞춤형 지원 확대

수용자자녀지원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지원강화	긴급구호물품(30만~50만) 지급횟수(최대 2회→3회)	단가 유지 지급횟수 확대 검토	점진적 지급단가 상향 검토		종합 평가
협력강화	보건복지부, 월드비전 등 민간협력 협의체 구성·운영	협력체계 표준화, 매뉴얼 제작		민간지원 성과 평가	
조직구성	본부 전담직원 1명 배치	전담조직 전국 통합 운영 체계 수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체계 수립		
법적기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조문신설) 추진	소속기관 재직직원 전담 직원 지정	관련 법안 등 추가 법제화		

□ 산업수요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직업훈련

“산업현장의 실제 수요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출소 후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

- (산업수요) 간병인(화성직훈교, 천안개방교), 스마트팜(대구교)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기술 인력, 신기술·유망직종 관련 직업훈련과정 발굴과 취업 취약계층 수형자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및 다양화 정신질환 수형자(의정부교), 고령자(장흥교, 전주교, 원주교)

※ 전문 기술 인력양성: 간병인, 스마트팜 등 산업수요 반영한 훈련 과정 신설·운영 및 신기술 반영한 훈련 과정 발굴

※ 맞춤형 훈련과정 운영: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인 노인·여성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 수형자 대상 훈련 과정 신설 및 훈련 기회 확대

세부사업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 기술 인력 양성	돌봄보건	스마트농업	산업안전	음식조리 (한식 제과제빵 등)	조선 금속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직업 훈련 과정 운영	직업재활	돌봄 (간병)	물류포장	시설환경	사무디지털

- (지역상생) 수형자의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26~'30. 희망센터 활성화 및 농촌일손제공형 외부통근 등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통한 공익적 성격의 교도작업 지속적으로 창출

세부사업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희망센터 활성화 및 외부통근 작업 등 지역사회 협력 강화	사천 희망센터 개관식	여성수형자 전담 외부 통근	희망센터	희망센터 및 외부통근 수요발굴, 운영 확대	

※ 희망센터 운영 현황

구분	개관일	수용자 정원	주요내용
밀양희망센터	2013. 09. 11.	10	탄소섬유 생산
아산희망센터	2016. 10. 31.	19	자동차 부품조립
평택희망센터	2023. 07. 03.	30	방화문 제작
홍천희망센터	2024. 12. 09.	20	식품류 가공, 포장
사천희망센터	2026. 3월 예정	10	농기계 부품 제작

③ 치료·재활 시스템으로 교정 혁신

□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체계 확립

“마약류사범의 의존성·자극추구성 등 근본적 범죄 요인에 대한 중독재활 체계를 구축하여 교정의 기능을 회복·재활 시스템으로 전환”

- (중독재활체계) 마약사범재활과 조직 신설^{4개과, (부산·청주여·광주·화성직훈교)}, 전담 교정시설* (^{5개→6개 기관}) 및 중독재활수용동을 확대하여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심층 재활교육,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연계 체계 확립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중독재활 체계강화	교정기관 4과(마약사범재활과) 운영 전담교정시설 확대(대전교도소)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강화	전담교정시설 및 중독재활수용동 확대			

※ 마약류수용자 대상별 재활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마약류수용자 기결			대상자	개요 '25년 실적	운영기관
	투약	비투약	미결			
기본 (40시간)	○	x	x	1~3범, REPI 1-4등급 또는 이수명령 40시간 이하	1,246	전 교정시설
집중 (80시간)	○	x	x	4범 이상, REPI 5등급 또는 이수명령 40시간 초과 80시간 이하	164	전 교정시설
심화 (120시간)	○	x	x	5범 이상, REPI 5등급 또는 이수명령 80시간 초과	41	전담교정시설 5개 (화성직훈·부산·청주여·광주·대구교)
회복이음 (160시간)	○	x	x	재활의지가 높은 마약류사범	138	전담교정시설 5개 (화성직훈·부산·청주여·광주·대구교)
중독재활수용동	○	x	x	재활의지가 높은 마약류사범	-	화성직훈·부산·청주여·광주
개별 메타인지 상담	○	x	△ (투약만)	미결수, 소년수를 포함한 주 가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URICA 11점 이하)	373	전 교정시설
자기주도적	○	○	○	전 마약류수용자	-	전 교정시설
중독 예방 교육	인성교육	○	○	전 수형자	4,931	전 교정시설
	교화방송	○	○	전 수용자	-	

- (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 강화) 중독 수준별 **기본·집중·심화·회복**이음 재활프로그램을 모든 투약사범으로 확대 **'26. 1,700명 수료 목표** 및 이수명령 집행을 관리

* 재범위험성, 이수명령 병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40시간), 집중(80시간), 심화(120시간), 회복(160시간) 구분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인원(명)	1,589	1,700	1,850	1,900	1,950	2,000

- (중독재활 다양화) 대상별 취약성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회복이음과정', '가상현실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중독재활 영역을 강화하고 참여 대상자 확대 추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맞춤형 중독재활 프로그램	여성 중독재활 프로그램 개발	여성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	판매사범 재범예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중독재활 콘텐츠 강화	중독재활 담당자 교육·운영 평가
	가상현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뇌파 장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가상현실 프로그램 기관 확대	가상현실 프로그램 운영 평가	
	뇌파 장비 도입			중독재활 화상 상담 운영	
	중독재활 전화상담 확대	중독재활 전화상담 운영기관 확대			
	외국인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범 및 정식 운영	청년기 중독재활 프로그램 개발	청년기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		

- 회복이음과정: 재활의지가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사회재활 연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 여성 중독재활 프로그램: 성별 특수성과 취약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 외국인 중독재활 프로그램: 한국어 의사소통 불가 등 외국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워크북 **영문·중문**을 활용한 외국인 중독재활 강화 프로그램
- 개별메타인지 상담: 마약사범 대상 중독단계 수준별 1:1 상담 진행
- **'26. 운영** 마약류 가상현실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 : 몰입형 콘텐츠를 활용한 마약류 단서 노출 치료 **(Cue Exposure Therapy)**로 대처 기술 및 자기 조절 능력 강화하는 프로그램

【 마약류 재범 유형별 가상현실 콘텐츠 】

- ▶ (충동·반사회형) 호기심, 즐거움, 성적 만족 등
- ▶ (외상·정서형) 스트레스 해소, 불쾌한 감정, 신체적 통증 감소 등
- ▶ (사회·동조형) 다른 사람의 권유 등
- ▶ (공통·습관형) 장기간 반복되거나 기타 포함되지 않는 동기

- 뇌파 측정 및 훈련: 마약류사범 뇌파 등 생체신호 양상 판단과 치료재활 효과성의 실질적인 측정과 기능회복 훈련을 위해 최신장비를 도입하여 전담교정시설 배치

- 회복유지 및 사회재활 연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용기한걸음센터 1342 전용회선’ , 중독재활수용자 전화상담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 ('26.~) 중독재활수용동 마약류수용자 대상으로 중독재활 전화상담 확대 계획

- 비투약사범·미결수용자 교육 강화: 이수명령 대상에 비투약사범포함 모든 수용자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1:1 개별메타인지 맞춤형 상담지원, 자기 주도 재활프로그램(워크북) 시행

* 집중인성교육과정 내 물질중독예방 교육 반영, 교화방송 EBS1 채널을 통해 거실 내 송출(주 1회 1시간)

※ 개별메타인지 맞춤형 상담: 마약사범 대상 중독단계 수준별 1:1 상담 진행

※ 자기 주도 재활프로그램(워크북): 스스로 워크북을 작성하여 단약동기를 강화하고 중독재활 패턴을 체화하는 셀프케어 시스템

○ (내부전문가 양성) ~~법무연수원~~ 중독심리사(한국중독심리학회 전문자격)·물질중독 재활실무과정 운영 및 ~~국제중독재활상담사협회~~ 등 국제 마약류 중독재활 전문가 자격증 도입 추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승급 경력 인정 추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내부전문가 과정	중독심리사 법무연수원 정규과정 운영		중독재활 담당자 심화 교육		
	국제중독재활전문가 단체 협의				국제중독재활 전문가 자격 도입 추진
	물질중독재활실무과정 확대				
	담당자 정서적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정서적 소진 예방 프로그램 확대			국제 중독재활 협회 등 담당자 회복프로그램 참여

□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구조 개선

“단편적 일회성 상담에서 벗어나, 평가-치료-사후관리 체계의 심리치료 구조로 재편하여 맞춤형 치료·재활을 강화”

- (심리치료체계) 최근 첨단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및 이상동기범죄 등 강력범죄, 이수명령 대상자 증가에 따라 수형자 심리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체계(심리치료과 신설 8개 기관*) 재구축

* 서울남부교, 여주교, 경북북부제1교, 포항교, 창원교, 전주교, 순천교, 목포교

【 심리치료 업무시스템 체계 】

- ▶ (본부) 심리치료 기획 및 연구
- ▶ (심리치료센터) 치료상황 점검 등 중간감독, 고위험군 심화과정 심리치료, 심리평가
- ▶ (소속기관) 기본과정 등 일반적 심리치료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심리치료체계 재구축	심리치료체계 강화 방안 마련	전담기관 확대 추진	전담조직 확대 추진		
교정상담사 양성	법무부 교정상담사 자격인정제 운영 규정 제정 및 시행 30명	30명	30명	확대검토	

- (심리치료강화) 정신질환자, 소년수형자 등 범죄유형별 심리치료를 다변화하여 수형자에게 체계적·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재범방지 효과 제고
 - '26. 9. 개발·운영 정신질환자 자가증상관리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
 - ※ 비대면 워크북: 집단·대면 치료가 어려운 수형자까지 운영 대상 확대(서울구 등 29개소)
 -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교정시설에서 정신질환자 대상 워크북 운영
 - '26. 하반기 소년수형자 가족참여 중심 프로그램 및 중독·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도입
 - '26. 하반기 11개기관* 운영 범죄유형별** 가상현실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심리치료 관리·분석 체계 구축

* 서울남부·밀양·포항·청주·정읍·목포 심리치료센터, 안양·의정부·진주·천안·군산 심리치료과

** 성폭력(6종), 스토킹(4종), 아동학대(4종), 가정폭력(4종) 총 18종

- ※ '28.~ 소년수형자정신질환(신경증) 수형자 가상현실 심리치료 콘텐츠 추가 개발

- '26.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척도 개발
- '26.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내 심리상담 자원 연계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과 출소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

【출소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연계 절차】

- ▶ (신청) 출소예정자 대상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후 희망자 신청 접수
※ 중독,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 (평가) 심리치료과(팀)에서 신청 수용자 대상 심리검사를 통해 상담의 필요성 여부 판단
- ▶ (의뢰) 심리치료과(팀) 직원(자격증 소지자)이 상담 바우처 신청을 위한 의뢰서 발급
- ▶ (상담) 출소자가 선택한 상담센터에서 정기적 상담 (전국 1,600여개 상담센터)

세부사업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자 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자기증상관리	개발·운영	운영평가	운영기관 확대		
소년수형자 가족참여 프로그램	도입	운영기관 확대			
중독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아동학대사범 프로그램				리뉴얼	
범죄유형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운영결과 분석 및 추가 개발 계획	가상현실 심리치료 콘텐츠 추가 개발		운영 기관 확대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척도 개발	척도 개발	도입 및 운영			

- (전문인력양성) 교정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치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정본부 자체 자격인증제 도입 및 심리자격 취득 지원, 사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심리치료 전문성과 효과성 강화

- '26. 상반기 「법무부 교정상담사 자격인증제 운영 규정」 제정
- '26. 하반기 「자격인증제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교정상담사 자격 검정

※ 매년 30명 교정상담사 양성

- '27. 하반기 교정상담사를 활용하여 수용자 심리상담 등 심리치료 실시

4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교정시설 구현

□ 과밀수용 해소를 통한 인권 처우 강화

“과밀수용 해소를 통해 수용환경의 구조적 인권침해 요인을 개선”

- (시설조성) '26.~'30. 교정시설 3개기관 신축, 3개기관 이전, 9개기관 수용동 증축을 통한 수용공간 ▲4,138명 확대 및 교정시설 간 수용인원 조정으로 수용편차 완화를 통한 인권 친화적인 수용환경 조성 (평균 100% 목표)

※ 교정시설 조성을 통한 수용정원 확대 계획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수용정원	51,014	51,395	51,505	52,403	54,752

연도	신축(3)	이전(3)	증축(9)
2026		원주교도소	
2027			제주교도소, 여주교도소, 인천구치소
2028			서산(지소)
2029	화성여자교도소	창원교도소	서울구치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2030	경기북부구치소 남원교도소	전주교도소	포항교도소, 정읍교도소, 춘천교도소

- (입구전략) 검찰·법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비형벌화 요구, 한시적 노역장 유치 집행 보류 요청, 환자 등 구속·형(노역) 집행 정지 적극 활용
 - 교정시설 초과밀 상황(수용률 150% 이상 기관 수용률 편차 조정) 발생 시 적극 대응 **형확정 이송 및 수용조절 이송, 상고수용자 조정 이송 등**
- (후문전략) 재범위험성 낮은 모범수형자, 고령자, 환자 등에 대하여 가석방을 적극 시행하여 연평균 가석방 출소율을 30% 상향 조정함으로써, 매월 1,300여명 (연평균 15,600명 출소, 2025년 기준 수용자 연평균 인원 65,109명) 출구전략으로 과밀수용 완화

※ 가석방 출소자 재복역률* (2021년 출소, 2025년 조사)

구 분	계	형기종료	가석방	가출소	사면
출소인원(명)	26,363	16,870	9,374	14	105
재복역 인원(명)	5,600 (21.2%)	5,022 (29.8%)	555 (5.9%)	8 (57.1%)	15 (14.3%)

* 재복역률 :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교정시설 수용된 자가 출소 후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

□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수용환경

"수용자의 기본권과 안전이 함께 보장되는 인간 중심의 수용 처우 체계 구축"

- (환경개선) '26기준 현재 운영중인 교정시설은 30년 이상 경과된 28개의 노후시설(전체 51.8%) 수용동 난방사업^{6개기관} 및 단열성능 강화^{11개기관}, 석면해체^{11개기관} 등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기능 향상

연도	단열성능개선(11)	난방시설 개선(6)	석면해체(11)
2026	강릉(교), 의정부(교), 대전(교)	울산(구)	여주(교), 의정부(교), 군산(교)
2027	경북직훈(교), 경북북부2(교)	경북북부제2(교)	경북직훈(교), 경북북부제2(교)
2028	목포(교), 공주(교)	경북직훈(교), 경주(교)	공주(교), 순천(교)
2029	제주(교), 춘천(교)	대구(교)	천안(교), 청주(교)
2030	여주(교), 경북북부3(교)	제주(교)	울산(구), 안동(교)

- (안전보장) 내진 보강, 스프링클러 확충, 방화선 구축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내진 보강: 26개 기관 356개소에 내진성능평가, 보강설계, 보강공사를 통하여 내진 취약 교정시설 재난재해 예방력 강화 추진
 - 화재 대응: 산지지역 교정시설 추가 옥외소화전 설치^{10개기관*} 및 수용동 스프링클러 미설치 기관^{18개기관**} 개선**, 소방설비, 소방차, 소방장비 정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정기적 매뉴얼에 따른 소방훈련 강화

* '26~ 옥외소화전 설치 예정기관: 2026년 산불취약 산지지역에 입지한 교정시설 중점 선정 및 설치

** '26~ 스프링클러 추가설치 예정기관: 2030년까지 강릉(교) 등 18개 기관 4,794개소 설치

- (AI감시) 산불 취약 교정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산림청 AI 지능형 CCTV 산불 감시 시스템 구축 추진 검토

연도	분야	연간목표
2026	내진보강	- 내진성능평가·보강설계·보강공사 26개 기관 추진(2026 ~ 2030)
	소방설비 구축	- 스프링클러 설치(강릉·경북제1·순천(교) 등 14개 기관 1,163개소)
	옥외소화전	- 산지지역 교정시설 외곽 옥외소화전 설치(10기관)
	AI 산불 감시시스템	- 시스템 구축 추진 검토(산불취약 교정시설)
	소방차 및 살수차	- 운영 및 구입 배치 계획 수립(6대 구입)
2027	매뉴얼 정비	- 기관 특성을 반영한 재난 대응 매뉴얼 현행화
	방화선 구축	- 주벽 및 외곽 철조망 주변 건조 등 제거(55개 기관)
	매뉴얼 점검	- 반기별 재난 대응매뉴얼 점검 및 현행화
2028	대피 계획 정비	- 대형 재난 시 교정기관 간 긴급 이송 계획 현행화
	매뉴얼 점검	- 반기별 재난 대응매뉴얼 점검 및 현행화
2029~2030	소방계획서 점검	- 교정기관별 소방계획서 점검 및 현행화

○ (작업환경) 안전관리 매뉴얼 및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전문성강화: **법무연수원** 작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과정 신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위탁 전문화 교육을 통한 안전교육 전담 강사 양성(**지방청별 1명 수료 후 소속기관 순회교육 실시**)

- 환경개선: 직업훈련장 냉·난방기(**냉방기 3개기관 9개, 난방기 2개기관 7개**) 확충*

* 냉방기: 포항교(6), 천안교(2), 순천교(1), 난방기: 포항교(6), 순천교(1)

- 내진보강: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홍성교 등 10개 기관, 16동**) 추진

작업환경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안전 전문성 강화	법무연수원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과정 교육 신설		대상자 확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 전담 강사 양성 과정	지방교정형 소속기관 순회교육 실시		전담강사확대	
환경개선	직업훈련장 환경개선 냉난방기 확충	작업장 환경개선 냉난방기 개선 추진			
내진보강	홍성교(3) 포항교(2)	안동교(1) 천안교(1) 목포교(2) 공주교(1)	춘천교(2) 남부교(1) 의정부교(1) 순천교(2)		

5 교정행정 혁신을 위한 AI와 첨단기술 도입

□ AI 교정 통합 플랫폼 구축

"교정행정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연계하는 'AI기반 교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AI 기반 교정'으로의 전환"

- (AI플랫폼) '26.~'30. 수용환경의 복합적 위험 요인 실시간 분석을 통해 교정사고 및 재범위험성을 사전에 탐지하고, 현장 수용관리 등 각종 처우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AI 교정 플랫폼 구축

- (사업예산 약 20억)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 추출시스템·문제행동 예측 모형, 교정 행정지원 언어 모델, 재범위험 예측 모델 개발, 수형자 다면평가 도입,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공 등

※ 교정혁신 프로젝트 목록

프로젝트	기간	핵심목표	세부내용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 추출시스템	2026~2027	수용자의 규율 위반 사례 자동 탐지 및 담당자 알림 시스템 구축	과거 수용기록 연동 → AI 패턴 분석 → 실시간 알림 대시보드
문제행동 예측 모형	2026~2028	수용자의 시설 내 갈등/위반 행동 예측으로 사전 예방	과거 데이터 학습 → 위험 요인 도출 → 예측 알고리즘 시각화
교정행정지원 언어모델	2027~2028	교정 행정 업무 효율화 (문서 초안 자동화, 법령 검색, 통계 시각화)	온프레미스(자체서버) LLM 구축 → 자연어 질의 기반 대화형 인터페이스 개발
수형자 다면평가 시스템	2027~2029	수용자 재분류를 위한 통합 평가지표 (행동, 가정환경, 범죄이력 등) 분석	지도학습 적용 → 빅데이터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
재범위험 예측 디지털화	2028~2029	재범 위험을 통합 지표 점수화 (범죄 유형 + 사회적 지지체계 분석)	범죄유발 요인 정량화 → 디지털 대시보드 + 리포트 생성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2029~2030	AI 분석으로 수용자에게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추천 (직업훈련/상담 등)	기존 프로그램 성과 데이터 학습 → 개인화 알고리즘 설계

- (AI활용분야)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 추출시스템·문제행동 예측 모형 개발 및 AI 기반 스마트 인성교육·법률서비스·카드형 수용자 번호표·외국인 정보 분석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 교정행정 혁신을 위한 AI 기술 도입

- '26. 1~8. 수용자 교정사고 이력 추출시스템 개발(교정사고 키워드 및 DB 활용)
- '26. 12. 수용자 문제행동 위험요인 조기탐지 예측 모형 단계적 구축
- '26. ~ 카드형 수용자 번호표 기반 교정시설 내 위치추적시스템
- '26. ~ 소송업무 보조를 위한 민간 생성형 법률서비스 도입
- '27. ~ 친사회적 스마트 인성교육 체계 구축(디지털 시민 교육)
- '27. ~ 외국인 정보 분석 체계 도입(정보역량 강화)

세부사업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교정사고 이력추출 시스템	시스템 개발 및 기능 구축 사용자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카드형 수용자 번호표 (시설 내 위치추적) * 법령 제정 후 사업 추진 검토	카드 전국 확대	거창구 구축 예정	영월교 구축 예정	청주여교 구축 예정	해남교 구축 예정
친사회적 스마트 인성교육 체계	전국기관운영 예측모형 개발	시스템 기능 단계적 구축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민간 생성형 법률 서비스	도입운영		고도화 추진		
외국인 정보 분석 체계	AI 번역시스템 도입 추진	시스템사범운영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AI 교정플랫폼 구축	문제행동 예측 모형 개발	운영	교정행정 지원 언어 모델 개발	재범위험행동 예측모형개발	맞춤형 교정 교화 프로그램 개발

□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정 디지털 혁신

"AI·빅데이터·지능형 시스템을 활용한 교정행정의 운영방식을 혁신하고
현장 중심의 첨단 디지털 교정체계를 구축"

- (첨단기술응용) '26.~'30. AI 영상분석 기능 도입으로 관제업무 및 안전
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적극적·선제적인 교정사고 예방기능 강화와 심리·
마약치료 분야에서 VR 가상현실 프로그램 운영
- '26. ~ 전자영상경비시스템 AI 영상분석 기능 도입
- '26. 하반기 범죄유형별 VR 심리·마약류 중독재활 치료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범죄유형별 가상현실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운영 평가	VR 콘텐츠 추가 개발		
마약류 가상현실 중독재활 프로그램	운영		기관 확대	운영 평가	

- (KICS 교정시스템 기능 강화) '26.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형사사법기관 전산 시스템 및 전자문서 연계, 전자적 송달·통지에 필요한 KICS 교정시스템 내 관련 기능 및 인프라 구축·운영 고도화

세부사업	2026년		2027년		2028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계	전자문서 연계·유통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연계	전자문서·데이터 연계·유통				
KICS 교정시스템 전자적 송달·통지 기능 구축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시행 ('26. 9. 28.)			
전산장비(고속프린터) 도입	1차 도입 ('25. 12.) *28개 기관 35대	2차 도입			
소송서류 업무 처리 매뉴얼 제작	업무 프로세스 정립	영상 매뉴얼 제작·배포			
소송서류 전담 인력 증원(+30)			인력 정밀 진단 및 전담 인력 증원 검토·계획 수립	전담 인력 증원 및 직제 반영	

* (~'25. 12) 1차 도입(28개 기관, 35대) :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서울(구), 수원(구), 동부(구), 인천(구), 남부(구), 의정부(교), 원주(교), 대전(교), 충주(구), 서산(지소), 대구(교), 부산(구), 경북1(교), 부산(교), 창원(교), 포항(교), 진주(교), 경북2(교), 경북3(교), 울산(구), 거창(구), 광주(교), 전주(교), 목포(교), 장흥(교)

** (~'26. 12) 2차 도입(30개 기관) : 1차 도입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약 40대 도입 예정

6 현장 근무자를 위한 교정공무원 처우 복지 개선

□ 한 단계 도약하는 교정 조직

“조직 인력의 안정적 확충과 전문기능 중심의 조직 재설계를 통하여 현장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정조직으로 도약”

- (조직인력강화) 과밀수용, 마약류사범 등 고위험 수용자 급증에 따른 교정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 과밀수용 심화, 고난도 수용자 증가에 따라 조직역량 강화 및 직무난이도·책임에 부합하는 통솔범위 적정화 도모
 - 현장 근무인력 운영 체계 강화를 위하여 교정시설 환경변화 대응 인력확충 방향 마련
 - 과밀수용 등 정책 현장 지원, 관할범위 합리적 조정으로 중간감독·지휘체계 강화
- (전담조직신설) 단계별 중독재활을 위하여 전담교정시설 및 중독재활수용동을 확대하여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심층 재활, 출소 후 치료재활까지 연계 체계를 확립
- (조직재설계) 미래산업과 성장·발전 중심의 신규 전략 기구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발전 방향 설계에 부합한 자율기구*, 총액인건비제**, 교정 주재관제도 신설, 유사기능 연계 등 적극적 조직 재설계

* 자율기구 기능: 긴급현안, 국정과제 추진 등 이행할 신규 전략기구

** ('25.12.기준) 교정본부 총액인건비 기구: 마약사범재활팀, 특별점검팀

- 본부 부서 업무 조정 및 소속기관 소규모 기능 기구 통폐합
- 본부 및 소속기관의 인력운영 및 업무 효율성 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직 진단 실시

□ 교정공무원 역량강화 및 처우 증진

“직무특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역량강화** 및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하여 전문성과 사기증진 등 **안정적 조직 운영 기반 마련**”

- **(역량강화)** 교정본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일반적 관리 업무를 지방교정청으로 이전하는 등 4개 지방교정청 기능을 강화하고, 본부는 정책 연구·기획 분야에 집중하여 조직역량 강화 추구
 - **(지방교정청 기능 강화)** 특수호송팀 운영 체계를 확립 및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방교정청별 자체 수용 및 교화정책을 수립, 특성* 전담교정시설 운영
- ※ ① 전문 직업훈련 및 청내 향소 ② 마약 및 중범죄 ③ 전국 상고수용자 ④ 성폭력심리치료 ⑤ 인성 및 집중교육
 - **(상담업무)** 교정상담사 자격 인증제 신설 및 운영
 - **(교육업무)** 교정교육 전문강사 1급 과정 운영 및 교정교육 특화 AI 전문강사 양성
 - **(교정경찰)** 수사업무 담당자 성과평가 가점제도 신설 추진, 교정 경찰 전문 교육 확대
 - **(현장대응)** 교도관 직무역량 경연대회 확대 운영 및 수용관리 전문 교육 강화
 - **(국제협력)** 교정공무원 해외 직무교류 추진 및 해외 교정 시스템 사례 연구 활성화
- **(처우개선)** 교정공무원의 의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퇴직 후 취업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 및 처우 향상을 위하여 마음건강검진, 국립묘지 안장 등 복지향상 제도화 추진
 - **(법률)**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교도관 직무집행법」 제정
 - **(복지시설)** 교정공무원 수련원(휴양원) 설립
 - **(처우향상)** 「국립묘지법」 개정 및 교정공무원 처우개선 지원(사기진작 및 수당 등), 교정공무원 마음건강검진 제도 도입
 - **(복지향상)** 교정공무원 피복센터 운영 정상화, 교정공무원 특별 성과포상금 제도 운영

7 개방성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교정정책

□ 교정정책 투명성 강화 및 국민 공감형 정책 실현

“교정정책 투명성 강화 및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해 국민 공감형 정책 실현”

- (개방성) 법무부 교정본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정보공개 확대, 민간·학 협력 인프라 구축을 투명한 교정정책 수립
 - 교정 통계 연보 발간 및 시각화 통계 자료 공표 및 교정기관 운영 데이터 (입소자 현황, 처우 프로그램) 공개를 통한 국민 신뢰 향상
 - 형사사법정책연구원 및 교정관련 대학 등과 연구용역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혁신적인 교정기법 개발
 - 국가정책의 AI 산업에 맞춰 교정 AI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기업과의 협력 강화
 - 교정시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사회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교정시설의 인프라 개방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 구축 추진

* 교정시설 체육시설(연무관, 테니스장 등) 개방 및 교도소 참관 활성화, 지역사회 사회기여활동 봉사활동 적극 참여

- (다양성) 교정업무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교정정책 실현, 실질적인 국민 참여 위원회 강화 및 참여 채널을 다각화
 - 다양한 세대 및 전문분야 위원이 참여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성화

* 위원회(5): 법무부 및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지방교정청 교정자문위원회, 법무부 교화방송자문단, 심리치료 중앙자문위원회

- 교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및 유기적인 본부 및 소속기관 간담회 (토론회)를 적극 실시하여 정책 소통 창구 마련
- 지역, 시민사회(교정교화위원)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교정시설 인근 지역과 수용자 취업 연계 프로그램 구축
- 대체복무 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를 통하여 복무 형태 및 복무 분야에 대한 개선과 인권 친화적이고 신뢰받는 대체복무제 구현

□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정홍보정책 및 이미지 개선

“AI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 및 다양한 외부자원을 통하여 교정정책 홍보 및 교정행정에 대한 이미지 개선”

- (정책 홍보 확대) 정책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교정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에게 열린 교정’의 이미지로 변화 추진
 - ‘회복적 정의, 함께하는 교정’ 등 감성적 키워드의 정책목표를 시각화 및 재범 방지가 곧 국민의 안전’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한 카드뉴스 연계 콘텐츠 제작
 - 주요 언론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획취재 및 보도자료 배포 확대를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관심 제고
 - 언론인 및 방송인 등 대국민을 대상으로 교정현장 체험을 실시하여 교정 현장의 운영 및 교도관 근무 여건 체험을 통해 교정 정책 홍보
 - 학교 속으로 찾아가는 ‘일일 교도관 선생님’을 추진하여 범죄예방 교육 및 교도관과 교정시설의 역할 소개, 미래세대에 대한 교정인식 개선
 - (미디어 환경 활용) AI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활용하여 교정시설 재인식 및 투명하고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 확충 비전을 제시
 - AI·일러스트 등을 활용하여 교정정책 소개 및 국민의 인식개선과 관심도 제고
 -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세대에 폭넓게 교정정책 및 이미지 홍보
- * 교정본부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등
- 교정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교정의 이미지를 제고

연번	법률안명	주요 내용	추진일정		비고	담당 부서
			발의(예정)	진행상황		
1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정)	○ 교정공무원 의료·직원숙소 제공, 수련원 등 복지시설 설치·운영, 퇴직직원 취업 지원 근거 마련	'25. 11. 12. 이성윤 '25. 11. 28. 박은정 '26. 1. 13. 이재정	'25. 11. 13. '25. 12. 1. '26. 1. 14. 법사위 회부	'17. 6.(20대) '20. 7.(21대) 정성호 발의 (임기만료 폐기)	교정 기획과
2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정)	○ 교정시설 조성 시 부담금 면제 인·허가 의제 및 지원사업 등 근거 마련	'26. 1. 28. 신성범	'26. 1. 29. 법사위 회부		교정 기획과
3	(가칭) 교도관 직무집행법 (제정)	○ 직원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 근거 마련, 국제협력·관계기관 협조 체계 구축, 지능형 교정시스템 구축·운영, 보호구역 지정 등	'26. 上 의원안 발의 예정			교정 기획과
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장기 재직 교정공무원을 국립 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	'26. 1. 12. 이인영	'26. 1. 13. 정무위 회부		교정 기획과
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사회복지사업 근거 법률에 형 집행법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 직원의 복지 관련 업무 수행 경력을 인정	'26. 上 의원안 발의 예정			교정 기획과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수사기관 수용자 조사 시 교정 시설 방문 조사 또는 화상 조사 원칙 명시	'24. 6. 7. 차규근	'24. 9. 9. 1소위 상정		교정 기획과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보관금 한도(400만원) 상향 입법, 헌정질서 파괴범에 대해 1개월 동안 보관금 입금 한도 규정 등	'25. 10. 30. 박균택 '25. 12. 12. 박상혁	'25. 10. 31. '25. 12. 15. 법사위 회부		교정 기획과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신입자의 성명·주민번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인상, 체격 등으로 특정 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입소 절차 개선	'25. 11. 21. 황명선 등 4건	'25. 11. 24. '25. 12. 1. '25. 12. 2. '25. 12. 31. 법사위 회부		교정 기획과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기본계획에 교정시설 신설·이전 사항 추가	'24. 6. 7. 이재정	'24. 8. 23. 1소위 회부		교정 기획과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강제력 행사 사유에 영장 집행 거부 추가	'25. 8. 7. 민형배	'25. 9. 4. 1소위 회부		교정 기획과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음란·폭력·마약 등이 과도하게 묘사된 유해 신문·도서 반입 제한 근거 신설	'24. 8. 30. 서영교	'24. 12. 6. 1소위 회부		교정 기획과
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수용생활 관련 고지 시 점자·수어 등을 활용하고, 활동보조기기 지급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진료와 같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처우 보장 강화	'25. 12. 3. 최보운	'25. 12. 4. 법사위 회부		교정 기획과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전·경·교통권 및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 재시행	'25. 7. 25. 박형수	'25. 7. 28. 법사위 회부		교정 기획과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 시 처벌 규정 신설, 직무 수행으로 인해 교도관 소송 수행 시 소송지원 규정	'26. 1. 13. 이재정	'26. 1. 14. 법사위 회부		교정 기획과